

MBC TV 100분 토론

◇모두발언

▲대통령 = 청와대 들어간지 두달 조금 넘었다. 제단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여론을 살펴보면 국민 모두가 만족해 하는 것같지는 않다. 썩 미더워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운 일은 참 많이 있다. 그러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잘하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긴다. 열심히 해서 국민 여러분이 안도하고 미더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분야

▲손호철 교수 = 고영구 국정원장, 서동만 기조실장 인사 문제로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평가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단행으로 여야간 상생의 정치, 국회와 행정부간의 관계 정상화가 수포로 돌아갔다.

▲대통령 = 항상 절대적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선택 가능성을 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 원장이나 서 실장이 인간적으로 훌

훌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국회에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있어서 평가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개혁과 국회 존중 두가지를 다하면 좋은데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잃고 있고 제기능을 다 못해, 제자리로 돌려놓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야당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원만한 관계보다 개혁을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할까 했는데 지금은 국회 기세가 하도 등등해서 가봤자 문전박대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안했다.

▲서명숙 시사저널 편집장 = 국정원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에는 기능 정상화 만이 아니라 DJ 정부 후반기 국정원 상층부를 이뤘던 호남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까지 포함된 것이냐.

▲대통령 =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국정원 책임지고 있는 주요 간부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지 않았다. 지역적 출신분포도 일일이 따져 보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면 국정원장과 기획실장, 1.2.3차장이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따로 민정.인사보좌관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서명숙 = 측근이란 말을 싫어하고 참모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386 참모인 안희정 부소장이 나라종금의 돈을 받아 시끄럽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점과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대통령 = 우선 이 문제에 관해 무슨 사실을 말하기전에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난감한 심정을 솔직히 고백드린다. 측근 용어도 싫어하지만 안희정씨는 내 측근이 맞고 통속적인 말로 측근이 맞다. 오래전부터 안희정씨를 동업자라고 얘기해왔고 동지라고 말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한두번 시도했는데 참모들의 반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중이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앞서서 얘기하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참고 있으라해서 말을 하지않고 있다. 나중에 다 밝히겠지만 안씨는 저를 위해 일해왔고 저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는 기소되고 수사가 끝난 후 밝히겠다. 수사중이 아니라면 지금도 밝히고 싶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래도 보고 받은 시점은.

▲대통령 =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맞을 때를 대신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 = 그에 대한 가부 답변을 드리면 여러 사실에 대한 추측이 나와 그것도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저를 위해 일해온 사람이며,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이상을 말하기 어렵다.

▲손호철 = 국정원 인적청산 얘기가 나왔는데 새 정부들어 호남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참모들은 사실이 아닌데 호남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반면 일부 정치인들을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 귀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생각은.

▲**대통령** = 호남 소외론을 말하기전에 자신있게 말하는데 어떤 참모도 내 귀나 눈을 가로막지 못한다. 지금은 독대가 없어졌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참모들이 모여 토론하며, 토론을 거치지 않으면 결론을 내지 못한다. 어떤 참모도 귀를 막지 못한다. 심지어는 제가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기도 한다.

호남소외와 편중문제에 대해 제가 그렇다 그렇지않다 대답하기 어렵다. 실제로 자릿수 몇개가 중요한게 아니다. 어떻게 요직이다 아니다 말해야 하고, 같은 1급이라도 요직이냐 아니냐가 있을수 있고, 어떤 부처는 편중이 있으면 다른 부처엔 반대의 편중이 있고. 호남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할때도 그 기준을 원적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아니면 고교졸업으로 할지. 현주소는 다 서울인데 이것도 가늠하기 쉽지않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부산에서 보선이 있어서 지원유세를 샀는데 호남독식론이 나왔다. 그래서 문민정부 시절에 여러분 이웃사람들이 얼마나 득을 봤냐, 400만 시민중에 만명이 재미봤다면 400명중 한명이 재미를 본것인데 부산시민 여러분이 편중인사를 갖고 얘기하는게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이든 명문고들의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라서 답변하기 좀 그렇다.

▲**손호철** = 서동만 교수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폭거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대통령** = 먼저 ‘호남인사’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5급, 4급 양성과정에서부터 균형이 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과 국회의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새로운 주

제로 협력할 것이 있을 때 적극 노력해 긴장, 갈등 관계를 해소하겠다. 나도 야당을 많이 했는데 여당을 공격하다가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한발, 두발 물러서고, 여론이 유리하다 싶으면 밀고 갔는데 그게 정치의 현실이고 게임의 원리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야당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대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의해 풀어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당정분리 입장인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신당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신당 및 정계개편 구상은 무엇인가.

▲**대통령** =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은 있으나 말하기는 그렇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개혁은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하고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은 뻔하지만 감놔라 배놔라 말 못한다. 대통령이 정계개편하면 국민은 협박과 매수로구나 라고 생각해 결국 정치후퇴가 된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통령의 음모니 공작이니 말한다. 나도 지금의 정국에 관해 말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차마 말하기 어려워 아끼고 있다. 지켜보고 의사를 표명할 때가 있으면 표명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 중진의 한 사람 자격으로 말할 것이다.

▲**서명숙** =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정치발전이라고 했는데, 신주류는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신당추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속내를 꺼내는 게 낫지 않은가.

▲**대통령** =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어느 선택도 다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제가 당을 만들고 제가 이끄는당이

과반수를 해야 한다는 식의 무리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수가 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자 = 국정원장 인선은 내용적으로 보혁구도 정계개편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대통령 =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정적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회자가 말하는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대통령 = 당정분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은 모순된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여야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초당적인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치문화나 분위기가 바뀌면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당을 깨라, 당을 같이하라는 식이 아니라 개혁의 분위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호철 = 인터넷에 ‘늬현스럽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는가.

▲대통령 = 못 봤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시킨다’는 말로 쓰이는데, 개혁세력은 실망하고 있다. 참여정부 50일을 자평해달라.

▲대통령 =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지으셨는데 목수가 오전내내 대패, 톱같은 연장만 갈고 있어서 어머니가 불평하셨다. 그러나 연장을 잘 갈아

놓으니까 오후에 금방 집을 짓더라. 유능한 공장장은 생산라인을 먼저 손보는 것이다. 위기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좀더 기다려달라.

--초기에 힘을 쓸 때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대통령의 힘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5년내내 국민지지를 모아가면서 해야 한다.

◇경제분야

▲김상철 기자 = 금주들어 경기부양을 검토하는 분위기로 돌고 있다. 대통령이 최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지도자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되는가.

▲대통령 = 제가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법칙'이라고 얘기한 것이 전쟁과 비유될 일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수도 있지만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토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 인터뷰 시에도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정책결정 및 발표 과정 하나 하나가 경제와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 경기부양 여부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그 후에도 재경부, 한은 등에서 경기를 체크해서 끊임없이 내부 검토하고 토론했다. 나도 참여하고 토론했다. 나는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기다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장기 정책에 대해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경기에 대해 밀고 나가면 사태를 그르

칠 수 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대통령이 인기를 위해 관리한 경기부양책이 다 실패로 끝났다.

정치인들이 경기관리를 직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장관, 한국은행 등의 전문가에서 맡겨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서 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 등을 늦춘다는 것은 경기가 좋으면 세무조사 확대한다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정치적 결정 아닌가.

▲**대통령** =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늦추겠다고 저는 말한 적 없고 경제부장관도 그 말을 한 일은 없다. 다만 공정거래부분의 경우 전체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갈 것은 가고, 가다가 불거지는 것은 철저히 한다. 다만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정 수준의 목표는 보통기업이 감당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속도조절론’으로 보도된 것으로 안다. 저는 경기 때문에 법적용 원칙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 = 방금 하신 말로 개혁이 더더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이 안심할 것 같다. 경제팀 내부에도 개혁속도조절론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들었다. 재벌개혁은 집단소송제나 출자총액제한제 등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있으나 그간 불거진 재벌관련 의혹만 파헤쳐도 투명성, 효율성 등 구조개선 유도효과 있다고 본다.

▲**대통령** = 공정거래위원장을 제가 선임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제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분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할 분 같다. 대통령이 공정위원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분을 선임하고 크게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전체적 원칙에서 일정 즉 3, 5년 등 기간을 두고 목표.계획을 세워 꾸준히 하십시오. 왈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평균기업이 수용할 수준

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법인세의 경우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대통령** = 실제로 보도되는 것만큼 부처간 이견이 있지 않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이견은 조정돼야 한다. 지금 과정이 무리없이 조정되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 총리,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계속 싸움질 해서 정책집행 시기 놓친다면 질책을 받아야지만 지금은 이견이 없고 이견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지켜봐 달라.

▲**김상철** = 집값, 땅값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하도 많아서 시청자들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래도 개발이익이 불이익보다 많으면 투기 나온다. 행정수도 관련 투기자금도 충청도로 갈 것이다. 선정시기도 취임1년내에서 내년말로 늦춰졌다.

▲**대통령** = 우선 지난 2001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부양 관련 몇 개 조치가 있던 것은 실책으로 본다.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여러가지 투기억제책에 대해 일반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게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을 본다. 행정수도 이전이 투기호재라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가능성 때문에 국가적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빨리 끝내라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 국민설득 과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행정수도 이전이 늦어지는 것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것 아닌가.

▲**대통령** = 미루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총선전 결정하면 행정수

도 주변 100km 이내에 또 다른 것을 배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김윤자 = 민영화는 개혁의 방법이 아니라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조흥은행 실사에 정부 개입 의혹이 있고 외국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 = 방미전에 (조흥은행 문제를) 마무리해 안심시키려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 조흥은행 독자 생존이 가능하며, 유리한 것인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금 파는게 유리한지 뒷날 파는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논란이 많은데 노조와 대화하고, 조사해 보고 실물경제 전문가, 은행 경영가들도 만나 얘기했는데...

--조흥은행 노조와 만나 한 말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다.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고무적이다. 다른 부분은 성급해 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는 실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정부 실무자도 속도를 중시하는 것 같다.

▲대통령 = 김 교수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조흥은행 노조를 만나 고심한 것은 독자생존이 가능하냐 안하냐였고 공정한 심사기관에 맡겨 평가해 보자고 합의했다. 그 뒤에 평가기관 선정과정에서 은행 끼어넣었다는 논란이 있다. 하이닉스를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한다 안한다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독자생존론과 혈값매각론 있었지만 지금의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나. 그때 판게 나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나. 조흥은행도 원매자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입견이 들어가선 안된다.

▲김상철 = 재벌개혁 추진에는 딜레마가 있다. 국내재벌 금융기관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외국 펀드는 된다. 국내외 기업 차별시 어떻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느냐. 국민의 지지를 모아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을 국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 굉장히 고민이다. 외국자본 보다 우리 국내자본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 점에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이 중요하다. 당장 결정하기 어려워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국내외 자본의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벌 기업이 지배하는 많은 회사에 60% 이상 외국자본이 들어왔다. 자기들은 외국에 주식 팔고 하면서 외국자본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의결권을 막았다고 하는데 외국의 M&A(인수합병)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줄 수 있게 돼있다.

국민이 반대해도 개혁을 할 것이냐는데 대해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라면 따라야 하는데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전형적인 것이 국민연금제 시행이었다.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또 의약분업을 많이 반대했으나 훌륭한 결단이고 개혁이다. 판단하기 어렵다.

▲**김윤자** = 경제팀에서 ‘자본에는 국적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 들린다.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얘기된다.

▲**대통령** = 그점에 관해서는 이미 차별을 둘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외국자본이 지배해 경제가 망한 경우도 있다. 한국도 그럴거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인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소위 투기성 단기자본이 기업 사냥하는 헤지펀드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책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 혼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그 과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차별로 문을 닫는 방

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청객 =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이다. 아이들 마음을 담은 편지 꾸러미를 가져왔다.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평화가 제일 필요한데 이라크전 있었다는 것이다. 학급 담임교사라고 하고 이라크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대통령 = 너무 어렵네요. 내가 지금 그 학생들 선생이라면 그럴 경우에 아이 가르칠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다를 수 밖에 없다. (대답을) 피해갈 수 밖에 없다. 선생님이 그 자리 섰을 때 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같을 수 없다.

▲방청객 =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대통령 = 한국 노인들은 그동안 한국이 여기까지 성장,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적을 이룬 분이다. 대우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대우 받아야 한다. 앞으로 2019년경 고령인구가 15%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래대책으로서 물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저조한 출산율, 고령화사회 대책 등을 준비 중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 한마디 보태고 싶다. 아이들에게 김옥균 선생과 함께 한 개혁당의 갑신정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요. 병자호란 시 최명길 선생과 삼학사의 노선을 어느쪽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요. 해방이후 김구 선생의 단정 불참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르치고 있는지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이 있겠습니까. 질문형식으로 드리는 답변으로 하지요.

▲**방청객**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민이 힘들어지고 있다.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수입개방협상에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 = 농업은 특히 식량,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치가 있다. 또 농민 가운데 연세 많은 분도 있어 산업 문제 아니라 하나의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문제이기도 한다. 개방화시대에서 단순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내맡기려 하지 않는다. 개방하지 않겠다고 우긴다거나 막아낼 수 없으면서 막겠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다. 쌀생산량 조정은 불가피하다. (쌀시장개방은) 받되, 식량안보 관점에서 논은 계속 유지하는 정책과 농업이 산업적 경쟁력이 있으면 성장시키되 안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

▲**방청객** = 신임 한총련 의장이다. 3월 대통령의 한총련 언급 이후 합법화 및 수배해제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170여명의 수배학생이 있고 수배 4년차 학생이 연행됐다. 한총련 이미 더 많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입장을 표명했다. 합법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총련, 시민단체, 관계부처, 대통령이 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 한겨레 21에 실린 의장의 공개편지를 읽어봤다. 일부 보도나 사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사회에 대해 철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에 고민하고 스스로의 조직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안도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

고맙게 생각한 것은 문구중에 파병을 동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결정할

때 고뇌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듯한 한마디 언급이 제겐 고맙게 다가왔다. 어떤든 생각이 서로 다르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하려는 자세, 열린자세라 생각한다. 의견의 합치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엿보여 느낌이 참 좋았다.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총련 문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런데 대학 교수도 나서고, 인권운동한 분도 나서서 정부당국자와 한총련이 토론의 마당을 만들어 대화하고, 대법원 판례도 수용할 질서이므로 저촉되면 부분적으로 규약을 고치고 해서 합법화로 나가자고 제안하는게 원래 구상이어서 선거 때도 말했다. 하지만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니 잘 안만들어졌다. 그 부분 보고서 법무장관에게 언제까지 그냥 둘거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법무부 소관이어서 이 문제를 푸는데 기존 검찰의 입장과 견해도 있어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앞서서 나서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모든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보다 법무장관이 재량을 갖고 푸려는 노력을 하므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 갔으면 좋겠다.

◇외교.안보.통일분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3자회담에 안 들어가도 좋다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 간 것인가. 그동안 국민들을 오도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 3자회담에 참석하면 주도가 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주도를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일방적 관점에 의해 관철될 수도 있고 한국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는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다.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았고 대화는 더더욱 멀리 있었다. 많은 국민과 언론이 조마조마하게 바라봤다.

단호하게 평화적 원칙, 대화의 원칙, 미국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는 것을 여러차례 발표했다. 미국과 완전히 판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 했지만 그후 제 말을 듣고 했든 안 했든 미국은 대화로 나갔다. 결국 평화적 해결밖에 없다는 상황을 모두 인식하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주도적이라 생각한다. 한국 입장과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정부내에 3자회담을 놓고 이견이 좀 있었다. 여론이 3자회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수모로 느끼는 수준까지 생각했다. 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 이 차이에서 외교장관과 차관보가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내가 주의를 주었다.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참여문제를 갖고 얘기하나, 참여문제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잘못 전달되면 그 압력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가자. 참여 못해도 좋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지금 4번째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에게 확인, 확인하고 있다. 억지로 참여하려고 판을 깨지 말라. 참여하든 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잘 풀리도록 상황을 조정해 나가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라고 했다.

▲**고유환 교수** = 북핵문제와 관련한 나쁜 시나리오 가능성은 생각하나.

▲**대통령** = 지금까지 강경론이야 말로 나쁜 시나리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고려도 없이 강경론을 펼쳐왔다. 나쁜 시나리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록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도 여러가지로 대비해야한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이미 하고 있다. 혹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방어해 낼 수 있는 안보태세는 한국이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는 가정 조차 않는 것이 지금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내놓고 말하기를 피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 이후 더 심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대통령** = 이런 민감한 문제일 수록 어떤 가정을 전제로 많은 말을 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

▲**김영희** = 북미간 협상내용은 충분히 듣고 있다.

▲**대통령** = 그때 그때 긴밀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로 점검했는데 미국 스스로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미국내에서도 강.온 양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를 부시 대통령에게 선수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 = 그 점은 그렇더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내가 지금 만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서 김 위원장과 나 사이에 핵심적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있어서 주한미군 문제가 있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문제도 있고, 남북관계도 핵문제나 군사적 긴장, 협력교류 문제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문제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따로 만나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괜히 되

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가서 사진만 찍는 이런 일은...

--김 위원장 만나는 조건이 핵포기 선언인가.

▲**대통령** = 그런 전제조건은 없다. 이 시점에서 만나면 뭔가 일보 진전된 타협을 이뤄낼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일 때 적극 제안하고 만나서 일보진전 하는 조치를 해나가야겠죠.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북관계도 바로바로 진전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유환** =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서 조기에 해결을 설득한다든가 협상의 기회로 삼을 의향은 없는가.

▲**대통령** = 선거 직전 후보시절에 김 위원장도 만나고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나겠다고 얘기했다. 그 당시는 북미간 대화가 단절돼 있었다. 그래서 대화를 잇기 위한 노력으로써 양쪽의 접근이 필요했다.

지금은 중국이 판을 만들어서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대화 판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지 내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되던 판도 깨질 수 있다.

만일 북미대화가 다시 끊어지고 또 다시 대화통로가 막혔을 때 여러가지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때는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다자간 여러 대화틀 만들어서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있다.

▲**김상철** = 미국이 혹시 북핵문제 풀릴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줄여달라는 주문이나 압력은 없었다.

▲대통령 = 없었다.

▲김영희 =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안을 준비하고 있나.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노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기반한 사회적 자유주의자로 보고 있다. 어떤 이념상의 좌표로 부시 대통령과 대화할 것인가.

▲대통령 = 얼마전 칠레 대통령이 와서 7월 유럽에서 열리는 진보지도자모임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고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와 가까운 분이 와서 블레어 총리의 같은 제안을 전해줬다.

블레어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정책이 블레어나 슈뢰더 독일 총리보다 더 왼쪽으로 가있지 않다. 좌우의 구분은 정치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아니 클린턴 전 미 대통령도 한때 진보그룹에 있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선거 등에서 정치적으로 공격받았던 게 증폭된게 있고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등으로 오해가 있었지만 그런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안다.

▲사회자 =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 = 국민에게 한국군의 자주국방 역량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고 있다. 실제 국군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고 싶다. 주한미군 재배치나 일부 축소문제같은 것은 한미관계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군사전략에 의해 진행되고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국민의 인식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크게 이용해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지난번 경선할 때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받았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식이다. 실제 그렇지 않다.

▲**김영희** = 앞으로 한미관계가 진행되면 군축협상까지 들어갈 것이다. 주한미군 2사단은 인계철선으로 우리로선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텐데 벌써부터 후방 배치한다거나 감축한다고 하면, 나중에 잘 쓸 수 있는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대통령** = 백번 옳다. 그 점에선 손발이 잘 안맞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하겠다.

▲**고유환** = 남북간에 군사관련 대화가 없다. 이유는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있기 때문에 군사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겠다는게 북측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이 있다.

▲**대통령** = 군사작전 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다. 그것을 포함해 우리의 자주국방태세 5개년 계획같은 것을 국방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해왔다.

다만 이 문제를 크게 내걸지않는 이유는 자칫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내놓으면 주한미군이 앞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인데도,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전제할 때 반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자주국방면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사회자** = 친미 자주노선인가.

▲**대통령** = 그런 말 한 적 있다. 친미자주도 있을 수 있다. 우호적 관계를

가지면서 자주적 국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자주만 말하면 반미주의자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자 = 친미라는 말에 굴욕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 =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겠죠. 사실보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판적이든, 친미적이든 간에 미국의 존재를 너무 확대해 크게 보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분야

▲김상철 = 노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청와대 보좌관중에서 가장 말이 많다는 분이 대통령에게 말을 줄이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 말은 의사전달 수단이다. 고민이다. 줄여보려고 하는데 줄이려니 불편하다.

▲서명숙 = 말이 앞서는 게 아닌가. 인터넷으로 장관을 추천받는다고 했으나 막상 네티즌 추천으로 장관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거대한 정치쇼가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있다.

▲대통령 = 누가 네티즌 추천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네티즌에서 추천된 사람이 있다. 마지막까지 심사대상에 오른 사람도 있다. 인기 만을 위하여나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김영희 = 386 참모들에게 ‘놔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운동권 출신 참모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 참모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표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우수하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멀리 보고 드물게 본다.

▲손호철 = 세계무역기구(WTO)에 교육개방 양허안을 낸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네 나라인데, 그게 세계적 추세인가.

▲대통령 = 농업개방은 세계적 추세다.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교육개방은 세계적 추세라고 한 적 없다.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냈다.

중등교육은 국민교육으로 하고 대학교육은 국민교육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교육은 개방하라고 했다. 그래서 양허안을 낸 것이다.

▲김영희 =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 국정연설을 들으며 등에 식은 땀이 났다. ‘나도 고통받고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무슨 고통을 받았느냐. 이른바 조중동 길들이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질타하고, 장관은 이른바 언론개혁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

▲대통령 = 그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이 다 다르다. 제가 언론을 박해할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문고시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신문만 근거없이 예외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는 언론개혁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가 나서서 한 적이 없다.

한국일보 한 교수의 칼럼에 세계 각국이 언론의 편향적 독점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정책을 한다고 했다. 영국도 언론평의회를 두고 있다. 언론도 국가정책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못할 뿐이다. 무슨 박해를 받았느냐고 했는데, 선거전날 정몽준 대표의 공조파기를 보도한 신문을 무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뿌렸다. 조선일보가 그러지 않았느냐.

흔히 밀월을 얘기하는데, 당선된 그날부터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합리적 비판만은 아니다. 저는 원칙대로 가겠다. 반론을 해야 하고 정정보도는 당연한 권리다. 법대로만 할 것이니 식은 땀 날 필요 없다.

--방송을 편애하는 듯하다. 방송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안될거라고 했지요.

▲**대통령** = 질문 잘해줬다. KBS가 아니면 안됐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5공) 청문회 관련해서 영상매체 위력이 없었으면 노무현이 안됐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신문이 더 이상 국민이나 법 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안된다.

--특권은 없다. 신문은 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검증받는다.

▲**대통령** = 어느 정권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지금처럼 비판한 적 있다. 대통령 대접한 일 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느냐.

▲**김상철** = 언론정책은 기자실 폐쇄와 공무원 언론 접촉금지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언론의 문제가 기자실이나 공무원 접촉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언론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 = 정상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기자실 폐쇄가 아니라 기자단 제도를 폐지.해체하고 기자실은 브리핑룸으로 개조한 것이다. 기자들은 계속 취재할 수 있다. 기자단 폐지는 유력언론 중심에서 인터넷 언론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접촉을 금지한 게 아니다.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무시로 불쑥 들어와 말 걸고, 서류 보자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일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게 전세계 기준이고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왜 한국만 그래야 하느냐.

▲**김윤자** = 노동정책이야말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개혁 만큼 중요하다.

▲**대통령** = 언론 개혁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자꾸 했다고 하느냐.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책을 말해달라. 개방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도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다. 정리해고도 법적으로만 복잡하지 희망퇴직은 자유롭게 일어난다.

▲**대통령** = 당선된 후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거기에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라고 돼 있길래 "노동자에게는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공권력을 앞세운 것으로 전달되니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력관계로 고치라"고 했다.

어제 저녁 노동관계장관과 정부 책임자들을 자유롭게 만나 2,3년 목표를 갖고 노사관계 목표를 정리했다. 새로운 노사문화 틀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만들라고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신이 많은 사회이지만 노동자에게 물어보겠다. 노무현을 못 믿으면 또 믿을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신뢰가 구축되고...전체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비정규직은 법상으로는 대단히 경직돼 있으나 현실은 유연하다. 현실은 좀 더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 마무리 발언

▲대통령 = (대통령을) 해보니까 어느쪽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게 많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서운해 하고, 또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반대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정책과 결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저도 좋은 정책과 결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나, 더 역점을 두는 것은 정책 생산과정을 좀더 합리적, 민주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제품보다는 생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당장 다가오는 것은 없어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성원해 달라.